

Issue Briefing

고용 친화적 재정정책을 위한 고용인지 예산편성 방향

2010. 4.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이강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 '고용인지예산'은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존의 예산편성이 성장위주의 정책이었다면 '고용인지 예산'편성은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고용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선정하는 것임
 - '고용인지 예산' 시스템에서는 성장 및 파급효과 보다는 고용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으로 성장타겟이 아니라 고용타겟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유치도 투자금액보다는 고용인원으로 Focus 맞추도록 하지는 것임
- '고용인지 예산' 도입 추진 방안은 먼저,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수렴하고 예산수립 시 예산편성 지침에 고용인지를 포함 하고 다음 단계로 도에서 조정 가능한 법률 내에서 고용인지 관련 규정 마련하고 시범실시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함
- '고용인지 예산' 도입은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매년 zero base에서 예산 배정 검토,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담보할 수 있으며 일자리 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실효성 평가를 수행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의 시행 목적과의 부합성, 일관성, 지속성 효과성을 판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
- '고용인지 예산' 적용 가능 예산 범위는 (1)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해당하는 노동관련 예산, (2)유아,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등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 관련 예산, (3)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 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과 같은 산업관련 예산, (4)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만큼 고용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SOC관련 예산, (5)복지 관련 예산 중 근로의욕의 촉진, (6)연구 인력에 해당하는 R&D 예산

목 차

1. 문제제기	1
2. 전라북도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2
1)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사업 현황	2
2) 일자리창출사업의 문제점	4
3)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	6
3. 일자리 중심의 재정정책 시행 방안	7
1) 고용인지예산의 편성의 개념 및 목적	7
2) 시행방안	9
4. 기대효과	10

1. 문제 제기

- 고용 없는 성장
 -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고 각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장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정부의 고용대책 미흡
 - 현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자리 관련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심의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간의 중복과 낭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제공되는 일자리가 단순·일회성일자리이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일자리 창출실적(예산지원실적)으로 평가되거나 사후 평가 자체가 없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일자리 정책이 정부의 최우선 아젠다
 - 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므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야 함
 -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예산 수립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적극적 일자리창출 정책 필요
 - 정부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일자리 관련 예산들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일자리 창출 위주의 예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2. 전라북도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 전라북도 2009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0개 사업에 117,253명이며 신규사업인 22개 사업에서 9,005명, 78개 계속사업에서 108,248명임
- 사업예산의 재원은 국비와 시군비로서 국비는 65.0%, 시군비는 31.2%인 반면 도비의 비중이 4.4%에 불과하여 도 차원에서의 예산의 집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건설투자는 국비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일부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 시군예산에 편성이 되어 집행이 되기 때문이며 건설투자 데이터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판단하는 데이터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실국별로 보았을 때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부문¹⁾으로 4조 1,649억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새만금환경녹지부문으로 5,392억, 복지여성부문 3,600억원으로 이 세 부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타 부처의 일자리 예산은 미미한 실정임
- 일자리창출 수를 보면 건설이 77,8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복지여성 16,926명, 투자유치 9,533명 순으로 이 세 부처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측면에서 건설과 새만금환경녹지는 인프라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용되므로 일자리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편중이 심한 편임
-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청소년으로 부서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많은 프로그램의 사업대상이 여성이며 장애인은 사업수요에 따라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는 있으나 전문성 보다는 사회안전망적인 차원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창출은 적은 편임
- 농수산식품국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도우미, 인턴제 환경정비사업등 연속성을

1) 실제로 일자리는 창출하나 일자리사업예산으로 분리하기는 해석상 문제가 있음

가지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으며 일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친환경농업육성분야, 농업경영체 등록제)

-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재보수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크며 문화재의 관리 및 정비에 예산이 할애되고 있으며 일부의 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업과 문화소외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공유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표〉 실국별 일자리 창출예산 및 목표

구 분	일자리 목표 (명)	총사업비(억원)			
		계 (민자)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17,253	52,759 (549)	34,276	2,301	16,182 (549)
새만금환경녹지	4,695	5,392	4,869	99	424
투자유치	9,533	213	104	53	56
전략산업	637	447	439	8	-
문화체육관광	1,470	108	57	21	30
농수산식품	4,031	3,600	2,740	287	573
복지여성	16,926	675	399	119	157
건설	77,883	41,649	25,558	1,702	14,389
대외협력	250	27	19	4	4
소방안전	344	78	78	-	-
새만금군산경자청	573	549 (549)	-	-	549 (549)
농업기술	911	21	13	8	-

2)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

(1) 중앙위주의 일자리창출 정책

- 국가주도로 지방정부의 역할 미미
 -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가주도로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어 지방자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적음
 - 대부분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비를 매치하는 형태이므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낙후지역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축소

될 수밖에 없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것임

- 매칭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악화시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

(2) 일자리창출사업의 통합조정 시스템의 부재

- 전라북도는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움
- 일자리창출과의 총괄기능이 부족하여 일자리창출과는 고유업무영역에 국한하여 사무를 보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수행시 업무영역의 선정에 있어 각 실국과의 갈등요인이 생기고 있음
-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산학연관커플링 등 일부 공모사업만 일자리 창출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조정시스템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자리창출의 목표의 설정 및 성과에 있어 불일치
-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발표하는데 부서마다 다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일자리창출 정책 결과에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인하여 공공과 일반인 사이에서의 일자리창출의 성과에 대한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3) 일자리창출 정책의 중복성

- 총괄조정기능의 부재로 중앙부처에서의 사업간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 이 문제가 지속이 되며 일부사업에서는 부처 내부에서 중앙과 지방과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함
- 하나의 예로, 중앙의 취업기관별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과 전라북도의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사업, 맞춤형 여성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은 중복성이 많음

(4) 성과 위주의 일자리창출 정책

- 일자리창출 정책이 성과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참여자의 의욕을 저해하고

있음

-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받음(희망근로, 인턴제, 도우미사업 등)
- 인턴마저도 시간참여를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대로 참여를 꺼리고 있음
- 성과위주의 정책은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유지가 어렵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정책이 치우쳐져 있음
-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사업은 1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나 모든 일자리창출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끝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5) 단순일자리의 제공

-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비숙련적인 일자리에 치우쳐져 있어 일자리 참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음
- 희망근로사업, 인턴제, 도우미사업, 노인일자리 가운데 공익형 등 대부분의 사업이 이에 해당됨
- 일자리 사업에 참여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다음 해에도 또 같은 일자리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6) 시장과 충돌 또는 타 시장과의 갈등

- 단순 일자리는 조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취약계층의 영역인 경우가 많으나 이를 공공에서 개입하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공병, 폐지의 회수와 같은 사업에 극빈층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단순일자리의 제공은 거의 복지수준의 일자리이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음
- 자영업의 경우 1일 3만원 순익이 어려운 상태에서 희망근로의 경우 5일 근무에 80여만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며 노동강도는 매우 낮아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간의 갈등소지가 많음

(7)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제도 미비

- 일부 공모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사전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평가를 하더라도 고용인지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그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공모에 의한 사업은 사전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사업은 사전평가 시스템이 없으며 사후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취업자들에 대한 관리, 미취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며 미취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수요적인 경우) 비슷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연계형 사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실적을 잡은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3)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

(1) “일자리인지 예산 제도” 운영

- 많은 일자리정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
 - ‘일자리인지 예산제도’를 통하여 단순일자리 사업의 감소, 일자리 정책의 중복성 문제의 해결, 사업의 평가 및 관리제도의 개선, 성과위주의 일자리창출정책,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정책기조가 성장위주에서 성장과 고용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향후에는 성장과 고용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성장위주의 전략에서 성장과 고용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국가가 주도하는 매칭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예산에 반영하는 적극적

인 예산제도의 운영 필요

-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하여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일자리 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일자리를 가장 큰 목적의 하나로 두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2) 부처간의 조정시스템의 문제의 해결

- 정책의 수립에 대한 부처간의 조정 시스템의 확보로 사업간 cross check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사업간 기능조정 내지 효과성의 지속적인 관리로 예산 활용의 효율성 담보
- 부처간의 조정을 위해 일자리창출과의 역할 강화 또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사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
- 칸막이식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예산이 칸막이식으로 내려와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
-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pooling 예산제를 도입하여 중앙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일자리창출 분야에 지역에서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있음

3. 고용인지예산 시행 방안

1) 고용인지예산의 편성의 개념 및 목적

(1) 고용인지 예산편성

-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하여 모든 예산에 대한 일자리창출능력을 고려하여 부서별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음

(2) 고용인지 예산편성의 목적

- 기존의 예산편성이 성장위주의 정책이었다면 고용인지 예산편성은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고용을 정책의 중요 목표중의 하나로 선정하는 것임
-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가 아닌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음
- 정부의 여러 사업들을 비교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효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용인지 예산편성은 복지 사업에 있어서 근로의욕 고취 효과를 가지는 정책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유도할 것임
- 산업지원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두는 사업에 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만들것임
- 실질적으로 고용인지 예산편성이 구체적인 고용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우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음
- 고용인지 예산 시스템에서는 성장 및 파급효과 보다는 고용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으로 성장타겟이 아니라 고용타겟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유치도 투자금액보다는 고용인원으로 Focus 맞추어야 함

(3) 고용인지 예산 적용가능 예산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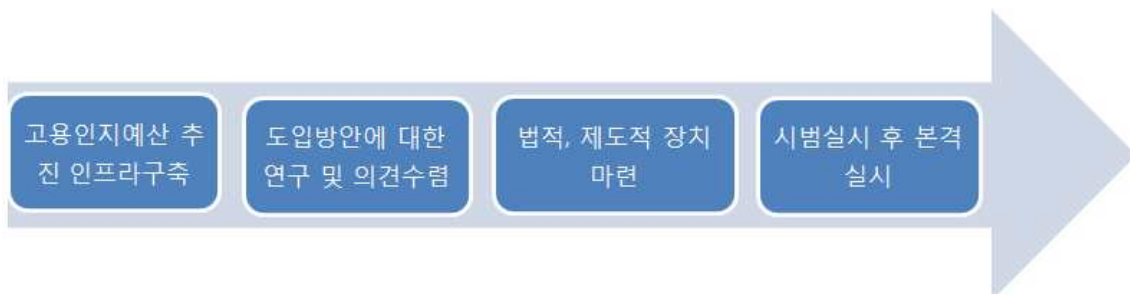
- 고용인지 예산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용가능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항목별로 고용인지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은 고용인지 예산이 가능한 분야임
 -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해당하는 노동관련 예산
 - 유아,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등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관련 예산

-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 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과 같은 산업관련 예산
-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만큼 고용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SOC관련 예산
- 복지 관련 예산 중 근로의욕의 촉진
- 연구 인력에 해당하는 R&D 예산

2) 시행 방안

(1) 고용인지 예산 도입 추진 방안

- 고용인지 예산 추진위한 인프라 구축
 - 고용인지 예산 도입을 추진할 추진 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를 관장할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TF팀의 한시적 운영
-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수렴
 -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에 대한 평가
 - 예산제도의 범위, 방법 및 예산제도의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등
- 예산편성 지침에 고용인지 포함
 - 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 시스템에서 고용인지의 포함
- 법안마련: 국가재정법내에 고용인지 관련 규정 마련
- 시범실시: 예산편성지침(안) 작성, 부처별 예산서 작성, 의견수렴
- 제도의 본격 실시



<그림> 추진흐름도

(2) 추진주체

- 추진기구 구성
 - 추진 TF팀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제도를 추진
 - 고용인지예산을 총괄하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 고용인지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과장을 팀장으로 한 TF팀 운영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실국 국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는 고용인지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의사결정
- TF팀의 구성 및 역할
 - TF팀은 예산과장을 팀장으로 한 예산관련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아래의 일자리창출분야의 연구, 법적제도적 정비, 평가 및 사후관리, 그리고 이발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3개의 분과로 운영
 - 1분과: 예산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연구
 - 2분과: 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 검토
 - 3분과: 예산제도의 평가 및 사후 관리

4. 기대효과

1)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 가능

-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매년 zero base에서 예산 배정 검토,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담보
- 일자리 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실효성 평가를 통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의 시행 목적과의 부합성, 일관성, 지속성 효과성을 판단함으로써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

2) 선도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제도에 대한 실행함으로서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 및 시장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표〉 전라북도 실국별 일자리창출사업 현황(2009년 기준)

부서	사업명	예산	일자리	대상
건설교통국	도로,하천등건설투자	41,649	77,883	일반
농수산식품국	농가도우미지원	7	500	여성
	농산물유통활성화분야	58	27	청년
	농산업인턴제	2	31	청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717	690	청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67	227	청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4	33	청년
	도특화품목육성사업	228	1,081	청년
	식품기술개발사업	42	102	청년
	양곡관리분야	78	29	청년
	정보화선도자육성	1	27	청년
	축산업육성사업	120	65	청년
	향토산업육성	76	34	청년
	식량작물생산분야	166	74	청년
	어업생산유통사업	161	364	청년
	어촌지역개발사업	137	128	청년
	원예특작생산기반구축분야	140	114	청년
	친환경농업육성분야	70	67	청년
	해외시장개척강화	14	343	청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인력양성인턴지원	2	20	청년	
농업경영체등록제	10	75	청년	
농업기술원	농사시험연구포장인부	11	350	일반
	청년일자리창출사업(농업기술원)	10	223	청년
대외협력국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22	220	일반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5	30	일반
문화관광체육국	게임아카데미운영사업	1	20	일반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4	20	일반
	국악분야예술강사	15	120	일반
	문화관광해설사	6	163	일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	96	일반
	생활체육지도사배치	14	66	일반
	어르신체육활동지원	5	21	일반
	장애인체육활동지원	2	7	일반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6	150	일반
	중요목소문화재경비강화	8	54	일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원사업	2	30	일반
	초등학교스포츠타강사지원	6	73	일반
	취약지역문화재환경정비	3	40	일반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사업	2	70	일반
	문화바우처사업	2	20	일반
	문화영상전문인력양성	1	25	일반
	신나는예술버스운영	2	20	일반
	전북순환관광버스안내해설사	0	5	일반
	문화재보수사업	17	376	일반
	공연예술단체운영	3	30	일반
	작은도서관운영지원	4	36	일반
	전북문화콘텐츠스타프로젝트	2	5	일반
학교마을도서관개방사업	2	18	일반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0	5	일반	

〈표〉 전라북도 실국별 일자리창출사업 현황(2009년 기준) 계속

부서	사업명	예산	일자리	대상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일자리	211	11,800	노인
	요보호아동그룹홈종사자	6	34	여성
	가사간병도우미	70	912	여성
	노인돌보미바우처	22	185	여성
	여성일자리	27	1,800	여성
	지역아동센터종사자및아동복지교사지원	44	361	여성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3	24	여성
	취약계층청소년방과후활동	22	30	여성
	금연클리닉사업	5	25	여성
	산모신생아도우미	16	216	여성
	예방접종등록관리팀운영	3	15	여성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관리	4	24	여성
	정신보건센터운영	9	24	여성
	맞춤형방문건강관리	26	127	여성
	아이돌보미지원사업	7	180	여성
	의료급여관리지원	12	46	여성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4	20	여성
	보육시설취사도우미파견	5	100	여성
	자활센터기능활성화	36	123	일반
	중증장애인활동보조	79	400	일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1	80	일반	
장애인일자리	24	400	장애인	
새만금경자청	새만금산업지구개발	549	911	일반
새만금환경녹지	녹색일자리창출	200	1,348	일반
	새만금방조제,방수제	3,736	570	일반
	새만금여난어민생계지원	28	1,064	일반
	환경기초시설SOC분야확충	1,399	1,456	일반
	국토대청소활동	14	167	일반
	도,군립공원녹색일자리	5	50	일반
	하천하구및도서지역쓰레기처리	10	40	일반
소방안전본부	문화재안전지킴이	9	74	일반
	소방청사신축사업	61	120	일반
	여름철물놀이안전요원	6	140	청년
	장기휴가소방공무원대체인력	2	10	청년
전략산업국	정부R&D사업유치	437	437	청년
	IT도우미	4	100	청년
	전문인력양성교육사업	6	100	청년
투자유치국	지역통계개발통계조사원모집	1	35	여성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지원	100	1,000	일반
	중소업체인력지원	29	300	일반
	기초생활수급가구가스시설개·보수지원사업	2	40	일반
	전통시장현장택배도우미배치	2	59	일반
	1사1인무역도우미사업	-	10	청년
	산학관커플링사업	8	150	청년
	맞춤형기술인력	7	200	청년
	희망을빌려드립니다.청년창업지원	3	100	청년
	전북경제살리기도민운동지원	2	16	여성
	전북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4	273	일반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	35	350	청년
기업유치	-	7,000	청년	